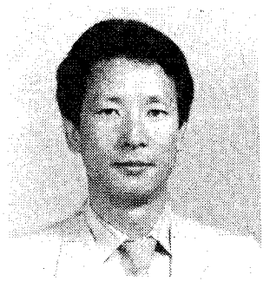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정부의 정보독점에 따른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교수논단

김 성 태
〈법대교수·법학〉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I. 문제의 제기

위싯귀는 쫓어서 죽을 수 밖에 없었던'시인 김형도가 작년에 발표한 작품의 일부이다.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이 시인이 개탄한 것처럼 부단한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감시체제를 운용하도록 땀흘려 세금을 바치고 있다.

윤석양씨의 자료공개로 시작된 보안사 사찰문제가 우리를 경악하게 한 지 벌써 한달을 넘기고 있다. 전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정부의 공식대응은 단지 '탈영한 이등병 한명'을 단속하지 못한 보안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요컨대 당국은 '이북에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인이 남편을 신고하듯' 국가의 조직을 들추어 폭로한 것이 문제일 뿐, 군정보기관이 각계각층의 인사를 대상으로 도청과 미행, 불법감시를 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보안사사찰파문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뻔히 보면서도, 경찰의 소위 유합강원(有給網員)들이 대학과 종교계를 계속 감시해왔음이 치안본부 자체보고서에 의해 드러났고, 안기부의 불법적 연행은 그칠 줄 모른다. 게다가 검찰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정보기관의 보안관리상의 문제로 치부하고 감싸고 돈다. 한술 더떠 정부는 사찰규탄집회와 때를 같이하여 이른바 '범죄와 의 전쟁'이라는 바람을 잡아 대대적인 범죄소탕에 나섰다. 민생치안부재로 인한 국민불안을 담보로 극형과 단속위주의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총기소지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대신 강력범이 수그러 들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치안당국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임의동행 기간연장을 기도하는 등 검찰과 손잡고 반인권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실로 어지럽다.

남의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캐어 공갈하는 추악한 정치, 세불리하면 감시대상자들을 몽땅 역적이나 빨갱이로 옭아놓고 주리를 틀어 판쓸이를 하는 타락한 정치행태의 선례를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그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II. 정보력(情報力) 남용의 위험성과 정부의 자세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그 자체가 힘이다. 정보를 쥐는 자가 우위를 점하고 지배력을 가진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면, 피지배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를 받으며 평생을 통하여 기록의 감옥 (Record-Prison)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국민은 결국 '어항속의 금붕어신세(fishbowl existence)'가 되고 만다. 최근에 노출된 일련의 사건은 정부가 관리. 운용하는 정보체계가 그 주체, 정보취득의 목적과 과정, 범위 및 감독방식 전반에 걸쳐 도덕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필자의 성급한 상상력발동인지는 모르겠으나, 죠지 오웰이 그의 정치소설인 '1984년'에서 예언한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게도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현실로 나타났음을 본다. 그의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필자로서 용훼할 영역이 아니지만, 거대한 정보기관과 각종 감시장비, 고문장치 등에 의해 현실을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국가권력을 고발하는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우리가 결코 내줄 수 없는 근본 가치이다. 나아가 공동생활의 원초적 영역인 私生活 (Privatleben)을 보호함은 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해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생활파괴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의 자유(제15조),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제16, 17조)등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힘을 갖는 국가가 제대로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그 정보력을 휘두른다면 이러한 조문은 휴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사찰이라는 범법 행위가 공공연한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점을 들추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통상의 범죄가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공공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 정부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구위원회를 둔다고 발표하였다. 무엇을 더 연구하겠다는 것인지.또한 작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범죄추방운동과 관련하여 이것이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국민의 오해와 言語를 통한 국민통제라는 비난을 면하고,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를 먼저 척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할 바에는 이 운동의 명칭을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범죄를 제외한 여타 잡범들과의 전쟁'으로 하였어야 마땅하다.

III.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안-맺는 말에 대신하여

보안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사찰문제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것임을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사안의 중요성이 지대한데도불구하고, 이 문제를 종전의 관례처럼 사건의 홍수에 떠내려 보내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지극히 불길한 징조라 판단된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오웰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도 모르는 세계, 두가지가 모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가지 모두를 믿는' 이중사고의 껍질을 과감히 깨고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시간이 범죄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그 해독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국가기관에 의한 범법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맥락에서 약100여년전 프랑스의 드레퓌스사건에서 조르쥬 끌레망소가 한 지적은 여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국가이익-그것이 법을 위반할 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자를 칠 것이며, 국가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고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끝으로 집권당에 일언한다. 마침 각서파동으로 어지러웠던 내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수습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제 그들의 다짐처럼 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 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선 아 문제부터 법대로 엄정히 처리한 다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기를 당부한다. 왜냐하면 보안사의 사찰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다른 여러 문제들을 모두 덮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요, 6공전반기의 통치형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까닭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국정에 책임있는 현 정권의 정치인들이 그 구조적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각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들의 자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통령은 과거 보안사의 책임자를 지낸바 있으며, 그간 이 사찰기관으로부터의 보고를 직접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그를 보좌하는 최고위원 한분 또한 이미 60년대 초에 중앙정보부라는 사찰기관을 만들어 운영한 노련한 경험을 가진 분이다. 어디 그뿐이랴, 이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는대표위원은 자신의 정치생애 전반을 통하여 바로 이들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에 시달림을 받아오신 분이 아니던가? 그러기에 사찰, 공작정치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무슨 도움이 더 필요로 하겠는가. 아울러 이를 구조적으로 혁파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천재일우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의 추잡한 당권다툼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권의 책임자들이 이런 천금같은 기회를 외면할 정도로 무딘 판단력을 가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분들이 진지하게 의논하고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의 정치풍토에도 일말의 희망을 걸 수 있으리라. 집권당의 거듭 태어나는 다짐을 주시하고자 한다.

권력의 불법 사찰은 헌법을 유린하는 폭거

정보남용, 엄정한 법 처리후 근본 대책 마련해야

보안사 사찰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도전이며 6공 전반의 통치형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학술정보

통일문제 학술발표회

국제평화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학술발표회가 13일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주제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남북한 관계'로 발표논문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신수식, 정치학과, 석사4기)▲한국의 북방정책(조종수, 정치학과 석사2기)▲한반도의 단계적 통일 모델고찰(변세은, 정치학과 석사2기)

원자력 공학 세미나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는 오는 14일 오후3시30분에 213호(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갖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의학분야에 대한 핵공학 이용(Nuclear Engineering for Medical Physics Field)이라는 주제로 카톨릭의대 방사선과 조교수 서태석박사가 발표하며, '월성1호기 CANDU원자로 선택' (CANDU Option in Korea)라는 주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계통부 부장 김성년 박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 아시아 조정위 총회

제27차 아시아지역 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 연차총회가 지난6일 동력자원연구소 주최로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막되어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등 11개 회원국과 소련을 비롯한 11개 지원국 대표들이 참석, △석유자원에 대한 활동보고 및 점검 △연·근해 물리탐사 △지질연구 관련사업 △항공지력도 작성 △지열연구 △지질연대 측정 △연안지역의 지원관리 및 평가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U·R과 한국경제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국내 유수학자들의 견해를 수렴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한국경제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정기 추계학술세미나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다.

14일 오후2시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1)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농업 (2)우루과이라운드와 서비스분야를 이재옥(한국농촌연구회), 장의태 본교 경제과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독자투고 번역논문 "F.바하의 철학적 선언"에 대한 비판

'구조주의적 오류'의 산물

비유적인 번역일관, 정확한 내용 전달 못해

'맑스가 인간본성을 도외시했다'란 평가는 부적절

I. 원서(原書)를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이해하자

지난호 대학주보 제965호(1990년 11월5일자)10면에 학술특집으로 '포이에르 바하의 철학적 선언'이라는 題下에 실린 내용(번역)은 번역자의 원전('For Marx」, Louis Althusser, 1977, NLB(영역본))해석과 이 글에 註를 달은 편집자의 Althusser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II. 번역상에 나타난 구체적오류들

강준원(사학, 2)은 「For Marx」의 1장(43~48면)을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비유적인 번역으로 일관함으로써 정확한 내용 전달과는 멀어졌다.

또한, 영어문장 구조와 단어(Word)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용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다. 많은 오류들 중에서 단지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In principle, history should be reason and liberty. (원칙적으로 역사는 이성과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원칙적으로, 역사는 이성과 자유이어야 한다.)

1840년에 청년 헤겔학파(the Young Hegelians)의 「역사」는 이성과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곧 이성과 자유의 영역이었다.

First of all, they are of historical interest! 「For Marx」 44면).

(무엇보다도, 그것들「1840년대의 포이어바흐의 저작들」은 역사적 관심거리이다.)

이 문장은 빠뜨리고 번역하지 않았다.

Articles like On the Jewish Question or the Critigue of Hegei's Philosophy of the State cannot be understood outside the context of the Feuerbachian problematic.

('유대인 문제' 도는 '헤겔 법철학 비판' 같은 논문들은 포이에르바하·문제설정의 외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다.

('유대인 문제'또는 '헤겔 법철학 비판'과 같은 논문들은 포이어바흐의 문제설정(Feurbachian problematic)의 상황(문맥) 외부에서는 이해되어 질수 없다.)

The German Ideology is the first work indicating a conscious and definitive rupture with Feuerbach's philosophy and his influence.

('독일 이데올로기'는 포이에르바하의 철학과 영향으로부터 양심적이고 확연한 결별을 드러내는 첫 저작이다.)

강준호는 여기서 'conscious'(의식적)와 'conscientious'(양심적인)를 혼동하고 있다. ('독일 이데올로기'는 포이어바흐의 철학과 그의 영향과의 「의식적」이고도 명확한 결별을 나타내는 첫번째 저작이다.)

III. 알뛰세(Althusser)와 구조 주의(structuralism)

과연 알뛰세는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할수 있는가?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구조주의의 주요 조류는 비록 알뛰세가 이른바 '구조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자기의 관점을 구별하려 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뛰세의 논문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알뛰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사회이론에서 인간의 주체를 배제시켰고, 사회전체에 구조화된 인간의 실천(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수준의 '새로운 과학'을 건설하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휴머니즘적' 또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전체(생산양식, 사회구성체와 같은)의 구조분석과 관련된다. 즉 마르크스는 보편적 인간본질 혹은 본성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알뛰세는 이론적 반휴머니즘을 신봉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인간본성의 모든 개념을 거부했다는 이러한 주장은 문헌상 뒷받침 될수가 없다.

구조주의자들은 현상의 '인간적 의미'라든가 역사의 '연속적인 생성'이란 겉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학적 분석은 그러한 것을 해체'하고 그 밑에 숨어있는 '비인간적인 구조', '비역사적인 체계'를 해명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는 직접 볼수있거나 관찰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그리고 그 기능은 사회체계의 더욱 심화된 논리를 구성하는 수준의 실체이다'라고 주장한다.

알뛰세는, '마르크스는 현대사회를 다같이 하나의 결과임과 동시에 하나의 사회로 간주하였다'고 하면서 결과의 문제, '말하자면 기존 생산양식의 역사적 산출의, 즉 기존의 사회구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 알뛰세는 역사적 변화에 거의, 혹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몇몇의 마르크스주의적 구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극단적인 단계로 까지 발전시켜 실재하는 객관적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실재의역사가 존재한다는 관념은 경험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유물론적 과학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알뛰세와 그 후계자들은 인간동인(動因)에 대한 그 어떤 인과적 영향을 거부하고 엄격한 구조적 결정론을 주장함으로써 관념론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나열하였다.

구조주의는 발전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에서 발생한 현대사에 대한 계급투쟁의 관계를 희석화 시킬뿐만 아니라 대상의 질적 규정성과 관련된 내부구조의 상대적인 안정을 절대화 함으로써 사물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정하며 나아가서 자본주의 사회의 질적구조의 불변성을 납득시키려 하고있다.

신 동 인
〈철학·3〉

코오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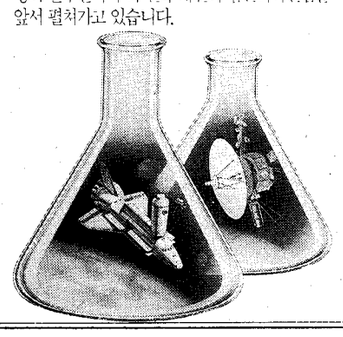
코오롱, 과연 어떤 기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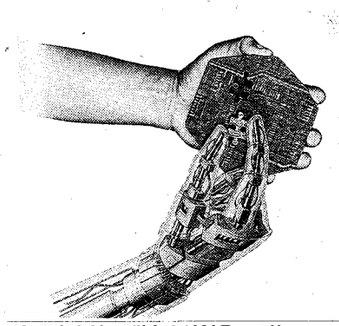
광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비롯한 놀라운 신소재로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리드하는 선두주자 코오롱 –

각종 고급원사에서 산업용 섬유를 포함한 합섬의 전부분에서 업계 정상의 위치를 고수해 온 섬유의 명문 코오롱 – 강철보다 강한 섬유 아라미드펄프,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 섬유, 광섬유 등 이땅의 의생활 혁명을 주도해 온 코오롱의 역사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의류용소재에 국한하여 생각되어 오던 섬유산업이 이제 코오롱의 첨단기술에 의해 지구촌 인류의 미래생활 전 영역을 커버하는 섬유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를 포함, 정밀화학과 생명공학에서 미래 세기를 리드하는 코오롱 –

코오롱의 화학산업분야는 이미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폴리에스터 필름, 고감도 코오롱비디오테이프, 세계 최첨단 기술분야에서만 연구되고 있는 DAT(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그리고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도 녹지않는 꿈의 신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코오롱의 집념 – 코오롱 290여명의 연구진이 우리 민족 내일의 첨단화학산업을 앞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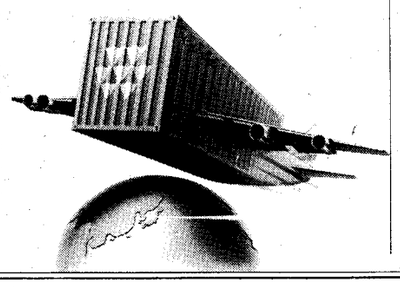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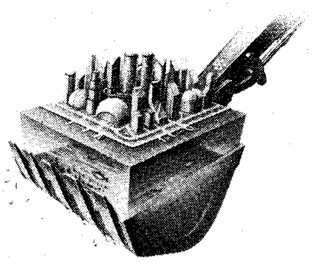
항공전자 신소재부터 산업용 고기능 로보트까지 우주시대의 첨단공학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

미래산업의 총아라 불리우는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로보트산업 등에서 이미 선두주자로 나선 코오롱 – 각종 공작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 수치제어기 CNC를 비롯 산업용 로보트, 공장자동화 시스템의 첨단제어장치인 PLC와 레이저 가공기분야 등에까지 고부가가치 최첨단 산업에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국민생활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해 민족번영의 염원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의 우수성과 코오롱맨의 신용으로 무역왕국 코리아의 기반을 앞서 다져나가는 코오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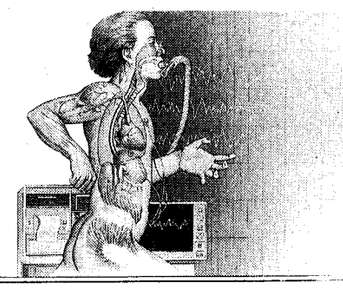
무역에 대해 무관심했던 36년전부터 코오롱의 수출 역군들은 세계 무역시장을 뛰면서 자랑스런 MADE IN KOREA의 신뢰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왔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빙하의 알라스카까지가 코오롱의 무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이 달려있는 지구촌의 이 치열한 무역 전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오롱은 다음 세기의 다국적 복합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토목, 항만, 플랜트 및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미래도시 건설의 신공법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

이제 건설분야는 힘과 규모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내의 대규모 공사에서 까다로운 해외공사까지 언제나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기술적 명성을 쌓아온 건설의 역군 코오롱 – 세계 두번째 ILM 공법 해상교량화(광양만)시공, 지하 연속벽 시공(부산지하철), 세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21세기 건축기술의 총아로 불리우는 서울올림픽 수영경기장 등 그 정밀시공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코오롱은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도시의 소망을 이미 구체화하여 건설 한국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세기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코오롱 –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꾸는 일 또한 코오롱의 몫입니다.
첨단기술과 생활을 연결하는 통신사업분야, 신용사회를 만들어가는 신용카드사업분야, 삶의 질을 높이는 레저 스포츠 사업분야 등 오늘은 물론 다음 세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코오롱의 서비스산업 의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에의 준비이며 원대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